

용산공원특별법 본회의 상정 불발... 1·29 공급대책 ‘빨간불’

관련 법안 처리, 정기국회로 연기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개발방안 검토
본회의서 비쟁점법안 30여건만 처리

정부·여당이 서울 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용산공원을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여야 간 이견 차로 이재명 정부의 1·29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등은 상정이 연기돼 정기국회 처리를 기다리게 됐다.

여야 원내수석 등은 이날까지 비공개 회동 등을 이어왔지만, 용산공원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정기국회로 넘어가 여야의 쟁점 사안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선 비쟁점법안 30여건만 처리됐다.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캠프킴(전 주한미군 주둔시설) 등 복합시설 조성 지구엔 공원이나 녹지 기준 대신, 유연하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올해 1·29 공급대책에서 용산 캠프킴 공급 물량을 1100호에서 2500호로 늘렸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 오르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진숙 의원 제명 동참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시

못한 점은 아쉽다”며 “도시재정비촉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은 서민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 시장은 모처에서 만나 화동했으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두근 합의하지 못하고 서울시가 역제한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개발 계획은 국토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본회의에선 광주 5·18 민주화운동 편제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도 있었다. 국회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 총 투표수 159표, 찬성 157표·반대 1표·무효 1표로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진숙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뉴라이트 계열 단체와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행

사를 주최해 여권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해당 행사에선 발표자였던 이영훈 교수가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살인마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주동식 호남대 안포럼 공동대표는 “이 체제에서 오염과 타락을 하게 된 그 주요 원인이 5·18”이라고 말해 논란을 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이진숙 의원의 5·18 편제 문제는 같은 국회에 앉아 있기가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 의안과에 이진숙 국회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이진숙 의원의 행사 주최를 두고 “민회의 전당인 국회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역사 왜곡의 장으로 변질시킨 것이자, 이념과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이 그 역사적 의미를 규정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왜곡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이후 국회 운영위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전날(25일) 의결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이의

원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에 국민의힘도 동참하라는 의미로 피켓시위를 실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 두발언에서 “오늘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계속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응징을 하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응당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명 촉구 결의안은 정치적인 의사 표시로 강제력이 없다. 이진숙 의원의 경우 민주당이 징계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추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구성되면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는 22대 국회 출범 후 28개월째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상 의원직 제명은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징계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제명이 확정된다.

이진숙 의원은 지난 24일 민주당 당대표 후보였던 김민석 대표가 광주전남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을 ‘여자 히틀러’에 비유한 것을 두고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며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장동혁, 당협위원장 직선제 의지 재확인

국민의힘 대표 취임 1주년 간담회
“중진 희생론, 지금 논의할 때 아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당협위원장 직선제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른바 ‘중진 희생론’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지금 당장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보수 진영 연대와 관련 해선 함께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당심을 얻은 당협위원장들이 위원장직을 이어가는 건 자라 히 당연하고 그것이 당헌·당규의 취지”라며 “그렇기에 당헌·당규에 따라 당협위원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 일반 당원이나 책임당원에게 묻겠다는 방향성에 반대하는 의원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방향성이 필요하고 또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제 확고한 신념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장 대표의 발언은 당협위원장을 당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뜻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시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원 투표 등을 통해 현재 당협위원장들을 전원 재선 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금까지는 관례에 따라 별도의 투표 없이 기존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당협위원장이 부재한 ‘사고 당협’을 중심으로 새 위원장을 선임했었지만, 이번에는 전체 당협을 ‘사고 당협’으로 보고 당원 투표 등을 거쳐 당협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당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했고, 당 의원총회

에서도 반대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결국 24일 결정을 내리기로 했던 당 지도부는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결정을 유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지금 반대 의견이 집중되는 것은 여당과 이재명 정권에 치열히 싸워야 할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 254개 전체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집중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협위원장 교체) 시기와 속도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이를 참고해서 시기와 속도,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당협위원장 직선제 선출 의지를 꺾지 않았다.

장 대표는 “중진 희생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총선 승리를 위해 고민해야 할 내용 중 하나”라면서도 “총선을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정부·여당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

李 “3대 메가투자자 초격차 산업 다극화”

전국 시·도지사와 중앙지방협력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전국 시·도지사들과 만나 “3대 메가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서주재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 말할 수 있다”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 추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완주~진안·무주 도로사업 예타 통과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전북 완주·진안·무주)이 26일 국토 26호선 완주 소양~진안 부귀와 국토 37호선 무주 설천 삼곡~두길 사업이 제6차 국토·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을 두고 국가 계획 반영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는 이날 전국 142개 대상사업 가운데 54개 사업의 예타 통과를 확정했다. 전북에서는 총

5개 사업이 통과했으며, 이 가운데 2개가 안 의원의 지역구인 완주·진안·무주 지역 사업이다.

전북지역 예타 통과 사업은 ▲남원 인월~산내 국지도 60호선(8km·924억원) ▲무주 설천 삼곡~두길 국토 37호선(8km·1026억원) ▲완주 소양~진안 부귀 국토 26호선(2km·1037억원) ▲전주 도도~김제 공덕 국토 21호선(10km·2229억원) ▲김제 공덕~군산 대야 국토 21호선(10km·2300억원) 등이다.

/박태홍 기자

‘지선 참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정리한 후보 자작극도 타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가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자신이 제안한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제안이 동력을 잃자 26일 자진 사퇴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다.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 후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도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 사퇴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실시 등을 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당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개혁신당이 되기 위해 보다 절실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광역·기초의원 선거까지 총 185명의 후보를 냈지만 기초의원 단 1명을 배출해내는 데 그치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또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피습 자작극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점도 개혁신당에 큰 타격이었다. /박태홍 기자